

# 도의회 더민주 초선 의원들 파워 '막강'

### 전체 28명 중 19명... 원내대표에 박재만 의원 선임·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7~8명 도전장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막강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제10대 전북도의회 총 38명 도의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28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만 19명에 달한다. 10대 하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이 시작될 가운데 이들 초선 의원들은 결집력이 남달라 위상 강화는 물론 정치력에도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재선인 김재만(김제) 의원을 누르

고 초선인 박재만(군산) 의원이 선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내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두고 초선들이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개인을 위한 개별 행보보다는 미래를 위한 공론장을 찾으려는 초선들이 하나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의당 출현으로 미래 위기감이 그 어느 때 보다 짙게 드리우면서 공생과 상생 열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중진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다수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문제는 누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냐다. 이번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도전장을 던진 초선의원들만 해도 7~8명에 이른다.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인물이 없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협력적 모습을 보이면서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일단은 계파색이 없고, 합리적이며 인물론까지 받쳐주는 인사가 초선의원들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상임위원회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 이외에 더민주 원내대표를 맡은 박재만 의원과 정호영(김제), 한완수(임실), 강용구 의원(남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당 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양상빈 의원(장수)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으로 인해 간만에 잡은 정치력 확대의 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선들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의원들간 대승적 협력도 요구된다"면서 "어떤 의원이 좌장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신광명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에 박인숙·인재근·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20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을 민장임치로 선출했다. 국회는 앞서 본회의를 열고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복지위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정책을 담당하는만큼 국민이 바라는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며 "이 기에 부응하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 생산적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국회의 본질은 압력으로 부터 비롯되니, 제출한 법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빈곤 문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간사는 "소통하며 열심히 전문성을 살려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근 더민주 간사는 "국민의 행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지혜 모으면 다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 또한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간사들과 함께 보건복지위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역할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더민주 TF, 대검찰청 항의방문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어버이연합 등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15일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 항의방문했다. 이춘석 TF위원장 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 유를 묻고 조속한 수사 촉구를 위해 (대검)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현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증거인멸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버이연합 사건과 대비되는 롯데 그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역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00여명이 투입돼 수사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하고 있다"며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현재 정권과 관련된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사건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어버이연합TF의 대검 항의 방문에는 이춘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기, 박주진, 백해련 이세정, 표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성주 기자**



**지방자치를 지키겠다** 15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9일째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 당대표 친박 후보 4명... 최경환으로 정리되나

### 이주영·홍문종·이정현 출마 체비... 최경환으로 단일화 땐 3명은 최고위원으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8월 9일로 확정되면서 당 대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12년만에 집권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번 전당은 종전 투표 방식과 달리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를 분리 선출하게 된다. 전대 출마자들은 일단은 최고위원 경선이 아닌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박계는 후보가 넘친다.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1순위 주자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레일덕을 막고 내년 대선에서 '친박 역할론'이 절실한만큼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친박 핵심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하면서 당정관계에서 변화보다는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역시 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정체제 구축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의 이주영 의원에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당내 쇄신그룹의 맹형으로 활동해오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며 '신친박'으로 자리매

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을 재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합과 쇄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대적 요청과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내 희생을 통해서라도 당을 재건하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겠다"고 당 대표 도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현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당 대표에 호남 출신이 당선되는 것은 정치적 상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실현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정치 혁신이고, 정치 쇄신이고, 정치 개혁이고, 새누리당의 대변화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특히 비박계의 '친박 2선 후퇴론'을 겨냥한 듯, "새누리당에 대해 고칠 것이 고치고 지킬 것 등을 제대로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뱉속까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핵심 중진 홍문종 의원도 전대 출마를 굳혔다. 홍 의원은 "저는 처음부터 당 대표만 준비했었다"면서도 친박 내 교동정리 필요성에 대해선 "앞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처럼 친박계 당 대표 후보군만 4명에 이르지만 대척점에 있는 비박계에서는 마

땅히 내세울 후보가 없다.

정병국 의원이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도다. 여기에도 비박계 단일 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비박계가 해당 인사를 진폭 지지할지도 확실할 수 없다.

또 장외에 있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

중합해버린 기세 싸움에서는 친박이 절대 우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친박에게도 고민은 있다. 자칫 친박계가 복수로 출마하고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혼자 나서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될까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다.

이무리 친박이 우세하다 해도 4명의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 표가 어떻게 갈라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친박 내부에서는 교동정리를 통해 당 대표 선거에는 한 후보를 응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내부에서는 최경환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단일화하고 다른 후보들은 최고위원 쪽으로 출마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로친박당'이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친박 입장에서 비박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는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시 친박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주 기자**

## 더민주 당대표 선거 후보 3명으로 제한 그 이상은 예비경선 통해 탈락시키기로

더불어민주당이 8월27일 당대표선거 본선에 내설 후보의 수를 3명으로 제한했다. 그 이상은 예비경선을 통해 탈락시키기로 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설명을 통해 "당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때 3

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대표는 8월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당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지난해 2·8전당대회와 동일하게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당원여론조사 10%)다.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권역대표위원 5명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

서 호선한다. 부문대표위원 5명(여성·노성·청년·노인·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해당부문 대의원 50%, 해당부문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은 시도당 대의원 50%,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이성주 기자**

## 도교육위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의결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건축공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건축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시설 부실공사신고센터와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라북도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도민 누구나 학교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각종 건축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및 공사관계자가 연회 이상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양용도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내 시설분야 첫 조례인 데다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례인 만큼 상징성과 부실공사 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 정운천 의원, 서남대 정상화 방안 논의

국회 정운천(전주)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남대 김경안 총장과 명지병원 이광준 이사장을 만나 향후 서남대 정상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본지 6월13일자 1면 보도)**

정운천 의원은 "교육부가 횡령과 비리로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다시 대학을 넘겨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재평가여자인 명지병원측에서 조속히 학교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9일 교육부 이영 차관을 만나 "서남대 의대 폐과는 전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신광명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진상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 "당 유입된 돈 없어" 의혹 전면 부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진상조사단은 15일 "당으로 유입된 돈이 없다"며 리베이트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상돈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파악하기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광고대행업체 S사에 들어온 돈이 당 외부 등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들어 있다. 통장 사본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는 "브랜드호텔이 S사와 선거공보 인쇄업체 B사로부터 받은 돈이 두 개 계좌에 그대로 있다"며 "국민의당은 말한 것도 없고 우리당 어느 누구에게도 나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S사가 체크카드 형태로 6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S사가 브랜드호텔 소속은 아니지만 홍보 작업에 투입된 외부 카피라이터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었다가 선관위의 조사를 받으니까 (직접) 주진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며 "체크카드는 한푼도 사용되지 않고 별도 계좌에 그대로 있다. (따라서) 외부로 유출된 돈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따라서 이른바 리베이트가 국민의당 관계자에게 흘러갔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브랜드호텔의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사실이다.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권한으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할 말은 없다"면서 "S사와 B사는 젊은이들이 만든 회사로 원래한 음모를 할 만한 회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선관위의 고발장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등 핵심 관계자의 조사 여부에 대해 "일단 관련 업체들을 (먼저) 만나보고 추후 설명을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민·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세 명의 면담을 통해 진술을 들어볼 예정이지만,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선숙 의원 등 지도부의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선거공보 인쇄업체·방송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브랜드호텔과 (각 업체가) 일을 (그렇게) 하기로 약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에서 시급하게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브랜드호텔에 이뤄진) 총 액수 3억원 규모의 일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 보기 어렵다. 당의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은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것인"이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